

“국민 불편 초래 송구”... 대통령실, 해외직구 혼선 사과

KC 인증 없이 해외직구 금지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구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안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

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대표·황우여 위원장 ‘대화’ 국민의힘 황우여(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대통령에 ‘NO’라 말할 수 있어야”

김진표 의장, 황우여 위원장에 강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과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마주했던 인연이 있다. 황 위원장은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고, 김 의장은 소수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였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당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 그 공로를 잊지 못한다. 언젠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에서 주먹 잘하고 머리를 들이받지 않고, 여야가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내가 1년이나 책임을 맡았던 오늘날 국회 현실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가 하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가 나쁜 목적으로 결합한다면, 상대를 악마화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제1야당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지금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정부가 안 끌려오는 이유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 결과는 결국 아무도 대통령에게는 ‘노’라고 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면 여당 의미가 없어진다”며 “정부·여당 전체가 대통령의 직속 부하가 되면 정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유권자 39%, 총선 때 소속 정당 보고 투표”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

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

(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품·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할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리얼미터,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

긍정 31.4%·부정 65.5%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는 1.1%p 하락한 65.5%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서울(6.1%p ↑), 광주·전라(2.9%p ↑), 인천·경기(2.5%p ↑)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대전·세종·충청(5.1%p ↓), 부산·울산·경남(4.6%p ↓)에서는 내렸다.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5.0%, 더불어민주당 34.5%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2.1%p 상승했고, 민주당은 6.1%p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3.5%, 개혁신당 5.3%, 새로운미래 1.3%, 진보당 1.3%, 기타 정당 2.2% 등이었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